영산강 마한문화권 개발 본격화

전남도 자문위, 28일 첫 회의
테마파크 조성·세계유산 등재
내년부터 10년간 3단계 추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착수할 3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이 포함되면서 가야문화는 국민적 관심을 끈 반면 호남의 근간인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야와 비슷한 시대에 태동해 비슷한 병합의 역사를 지닌 마한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전남도는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 고대 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기반조성기, 확장기, 성숙기 등 3단계로 나눠 15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반조성기 과제로는 마한 학술연구, 마한문화 특별전 개최 등 10개를 선정했다.

확장기에는 마한 역사테마파크와 역사테마길 조성, 연구총서 발간 등 3개 과제를 이행하고, 성숙기에는 세계유산 등재,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마한사가 반영 등 2개 과제가 추진된다.

다만 국비 1635억원, 민간자본 4030억원 등 총 6911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에 3억3000만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지원조례 제정, 지표·발굴 조사 등 지원, 전문가 자문위 운영 등 사업을 우선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야 문화권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지역 근간인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가야와 비슷한 시대에 태동해 유사한 병합의 역사를 지닌 마한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책임 물을 것"

방중 앞두고 '사드 엇박자'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관표 청와대 외교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또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정상 간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협력 본격 정상화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4일 개최되는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양국은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31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합의' 이후에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양국 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13일~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필두로 리커창·장더장·천민얼 등 중국 권력서열 최고위급 4인을 잇따라 만나 전방위 외교를 펼친다. 또 15일에는 충칭을 방문, 옛 임시정부 청사도 찾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축수산업계 '환영' 외식업계 '실망'
내년 설까지 구체적 지원책 마련해야

청탁금지법 개정 각계 반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수산업계가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 중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농업계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상한액 조정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40년 65세 인구 비율 광주 30%·전남 42%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노년부양비도 증가 전망

오는 2040년 65세 인구 비율이 광주는 30%, 전남은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고령자의 삶'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의 경우 전체의 11.9%이고, 2040년에는 전체의 29.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의 경우 전체의 21.5%이고, 2040년에는 전체의 41.7%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 올해의 경우 74.1명이고, 2040년에는 86.7명으로 높아진다.

전남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올해의 경우 67.7명이고, 2040년에는 84.6명으로 높아진다.

광주 15~64세 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올해 16.1명이고, 2040년에는 51.4명으로 늘어난다.

전남 노년부양비는 올해 32.6명이고, 2040년에는 85.4명으로 많이 늘어난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광주는 전체 고령자의 33.6%를 차지했고, 전남은 전체 고령자의 40.8%를 차지했다.

고령자 1인 가구 거쳐 유형은 광주는 아파트(57.0%), 단독주택(39.3%), 연립·다세대주택(2.7%) 순이었다. 전남은 단독주택(84.6%), 아파트(13.3%), 연립·다세대주택(1.4%) 순이었다.

2016년 기준, 자치구별 고령 인구는 광주의 경우 동구(20.3%), 남구(14.6%), 북구(12.2%) 서구(11.4%), 광산구(8.0%) 순이었다. 전남 지역은 고흥(37.5%), 보성(34.3%), 함평(32.9%), 곡성(32.6%), 신안(32.4%) 순이었다.

한편 2016년 기준, 고령자 사망원인(인구 10만명당)은 광주의 경우 암(828.6명), 심장질환(330명), 뇌혈관질환(319.3명) 순이었고, 전남은 암(823.6명), 심장질환(348.5명), 뇌혈관질환(317.4명) 순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광주의 경우 폐암(207.3명), 간암(109명), 대장암(91.1명)이었고 전남은 폐암(219.6명), 간암(115.7명), 위암(96.8명)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무인텔·콘도
• 화순 도곡 온천지구, 3개동 객실 52개
• 대 2980평 건 1050평, 2013년 준공
• 요양병원 연수원 변경가, 감정 70억
• 매 55억, 교환가 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식품공고사전등록
심의번호 : 21719239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7-197호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공고(1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251호(2017.12.0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화장후 봉안당 안치)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대지동, 지석동, 압촌동 일원
2. 소재지별 분묘기수

소재지	소 재 지 번 (분묘기수)
압촌동	411-4(33), 411-6(10), 411-8(2), 411-10(3), 411-11(15), 411-16(1), 411-18(2), 412-2(2), 412-3(13), 412-4(13), 415-3(32), 429-1(2), 429-3(1), 429-4(1), 429-7(1), 429-10(5), 429-13(3), 432-2(7), 432-3(3), 432-5(6), 435-3(15), 435-6(18), 435-7(7), 436-1(1), 436-2(2), 436-19(2), 436-20(1), 436-21(1), 436-22(3), 436-23(1), 436-24(5), 436-26(58), 436-27(5), 436-28(3), 436-29(2), 436-32(2), 440-17(1), 440-18(2), 440-19(5), 440-20(2), 440-29(2), 440-30(8), 441(1), 442(2), 444-2(7), 산50-2(7), 산51-1(44), 산57(14), 산61-5(2), 산64(7), 산65(10), 산75(1), 산82-6(3), 산82-8(13), 산87(79), 산88-9(2), 산88-11(1), 산88-16(3), 산88-17(3), 산89(5), 산90-1(4)
대지동	541-1(1), 541-3(6), 541-5(17), 541-6(2), 541-9(1), 541-10(2), 541-12(3), 541-13(1), 541-15(5), 541-16(1), 541-17(1), 541-18(2), 541-19(2), 541-22(1), 541-24(2), 541-25(7), 541-27(2), 541-34(4), 541-36(1), 547(22), 556-1(3), 556-3(1), 556-4(1), 556-5(16), 556-11(3), 산1(2), 산7(1), 산9(4), 산10(48), 산5-1(11), 산5-8(4)
지석동	325(12), 325-3(9), 325-4(6), 산18-2(7), 산19-2(1), 산22(59), 산23(4), 산23-1(1)

3. 개장사유 :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 편입
4. 공고기간 : 2017년 12월 12일 ~ 2018년 03월 12일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률에 따라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6. 유연분묘 개장절차
   - 분묘소재지 및 묘번 확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연고자 신고 → 증빙 서류 구비 후 대촌동 주민센터 방문 → 개장신고필증 신청 및 발급 → 개장 → 분묘이전비 청구 및 지급
7.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효령동 100-2번지) 광주영락공원 봉안당, 안치기간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보상팀 ☎ 062-600-671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빛고을 고객센터(1층 고객행복센터 내 보상팀)
   - 식별이 곤란하여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